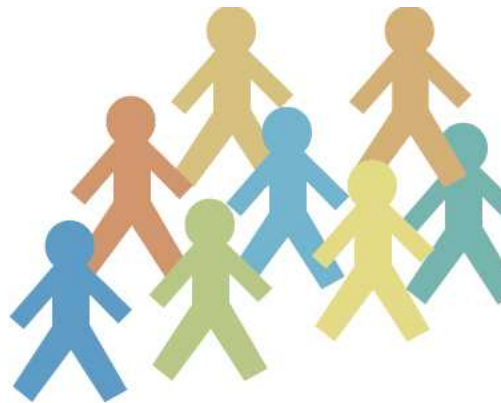




PHI Issue 2012-04

시민건강이슈 2012-04



2,114명의 시민들, 그들의 죽음을 기억하고
2천 4백만 일하는 시민들을 위해 투쟁하라!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시민건강증진연구소

People's Health Institute

< 차례 >

1. 우리는 누구인가?	1
2. 세계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과 한국사회	3
2.1. 세계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이란?	3
2.2. 1988년 15세 소년의 죽음과 2011년 2,114명의 죽음	5
3. 숫자로 보는 일하는 사람들의 죽음	7
3.1. 압도적 1등, 기이한 통계	7
3.2. 일 때문에 비롯된 죽음, 그 후	10
4. 이들의 죽음은 불가피한 것인가?	13
5. 결론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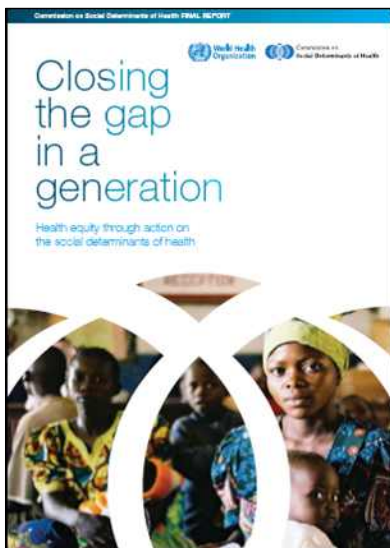
1. 우리는 누구인가?

한국사회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국민으로, 때로는 시민으로 호명된다.

만일 일을 하고 있다면 직장인, 혹은 근로자, 아주 가끔은 노동자로 호명되기도 한다. 이 두 가지 정체성은 서로를 배제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사회는 이 두 가지를 철저하게 분리한다. 물건을 사고 친구들을 만나고 가족 나들이를 하는 ‘시민’과 일터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는 같은 사람들이지만 평행 우주처럼 서로 다른 세계를 살아간다. 보건복지부와 노동부는 한 사람의 몸을 시민의 부분과 노동자의 부분으로 세심하게 분리하고 그들 각자의 시간대와 구역에만 관심을 기울인다. 그래서 매년 2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 때문에 죽어가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눈길 한 번 주지 않는다. 자칫 한 마디라도 했다가 타부서에 대한 월권행위로 비칠까봐 우려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몸이 아프면 ‘시민’으로서 아픈 것인지, ‘노동자’로서 아픈 것인지 알아서 판단하고, 건강보험으로 해야 할지 산재보험으로 해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인위적 구분, 좀더 정확히 말하자면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떼어내고 분리하는 접근은 일하는 사람의 건강문제를 사회적 공론의 장에서 체계적으로 배제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무고한 시민’이 다치고 병드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지만, ‘노동자’가 다치는 것은 그럴 수 있는 일이 된다. 한국 사회에서 전체 인구의 절반이 어떤 형태로든 일을 하고 있다. 이들은 잠자는 시간을 제외한다면 하루 중 가장 긴 시간을 일터에서 보낸다. 일터의 건강 문제, 일하는 사람



< WHO CSDH 보고서 > (2008)

의 건강문제를 고려하지 않고는 전체적인 건강 문제를 논하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문제는 보건학 내부에서조차 ‘주류’가 되어본 적이 없다.

이러한 모습은 한국이 그렇게나 떠받드는 소위 ‘글로벌 트렌드’에 배치된다. 2008년에 발표된 “세계보건기구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위원회” 최종 보고서 <한 세대 안에 건강불평등을 없애려면 (Closing the gap in a generation)>은 핵심적인 건강결정요인의 하나로 고용과 근로환경을 지적했다. 건강불평등 문제를 다룬 국제적인 학술논문과 국제/국가 전략보고서들 또한 고용, 근로환경 요인을 문제

의 중심에 두는 것이 현재의 ‘글로벌 트렌드’이다.



< 달그렌 (Dahlgren)과 화이트헤드(Whitehead)의 건강영향요인 모형 >
(출처: Dahlgren & Whitehead 1991)

문제를 우리 사회 전체, 우리 모두의 것이 아니라 일부 한정된 집단의 것으로만 바라본다면 해결의 전망을 찾기 어렵다. 한국 사회, 한국의 보건학계는 일하는 사람의 건강문제를 ‘산업재해’라는 특별한 범주로 구분하고, 일부 불행한 혹은 불쌍한 근로자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 일터에서의 건강문제, 노동자의 건강문제는 일하는 사람 모두의 문제이며, 보건학 전체의 중요한 과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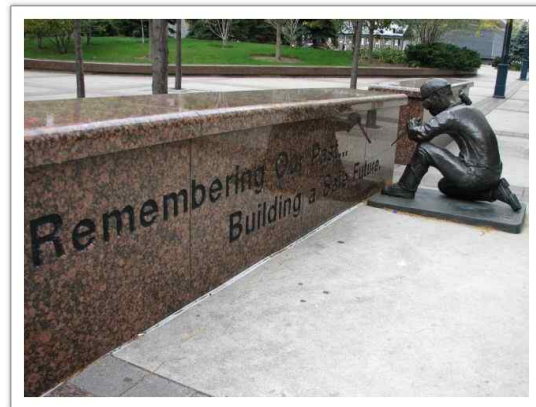
우리는 누구인가? 월급쟁이로 혹은 자영업자로, 일하며 살아가는 시민이 아니던가? ‘세계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시민”건강증진연구소가 산재사망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2. 세계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과 한국사회

2.1. 세계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이란?

4월 28일은 ‘세계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일하다가 다치고 병에 걸리고 죽어간 전 세계의 노동자들을 기억하고, 더 이상은 산업 재해로 고통 받는 노동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투쟁하자는 약속의 날이다.

이 날은 1984년 캐나다 공공노조(CUPE)가 온타리오 주에서 ‘산재보상법’이 의회의 최종심의를 마친 1914년 4월 28일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진 것에서 유래했다. 캐나다 노총(CLC)은 이듬해인 1985년부터 4월 28일을 산재 노동자 추모일로 선언하고 매해 전국적인 추모 행사를 진행했다. 1991년에는 이 날을 법정 추모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캐나다 연방 의회를 통과했다. 이후 캐나다의 각 주 및 지방 의회에서는 매년 4월 28일 오전 10시 산재 사망자를 추모하는 묵념을 실시하고 있다. 캐나다의 뒤를 이어 1989년 미국 노총(AFL-CIO)도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과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이 처음으로 업무를 시작한 1971년 4월 28일을 기념하며 추모 행사를 시작했다. 1992년부터는 영국의 노동자들도 이 날을 기념했다.



< 캐나다 토론토 Simcoe 공원의 산재 노동자 추모 조형물 ‘100인의 노동자’ >
(출처: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renewal_col&nid=31296)

4월 28일이 국제적인 추모의 날이 된 것은 1996년 뉴욕에서 개최된 ‘UN 지속개발위원회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에 참여한 각국의 노동조합 대표들이 4월 28일 뉴욕의 유엔 본부 앞에서 촛불을 들고 산재로 죽어간 노동자들을 추모하며, 전 세계에 추모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면서부터이다.

현재 15개국이 4월 28일을 공식 기념일로 지정하여 국가 차원에서 산재 노동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또한 세계 110여개 국가의 노동자와 연대 단체들이 이 날을 기념한다. 국제노동기구(ILO)도 2003년부터 4월 28일을 ‘세계 산업안전보건 의 날 (World Day for Safety and Health at Work)’로 정하고 산재 사망 노동자에 대한 추모와 함께 산재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¹⁾

한국의 경우, 1988년 7월 2일, 당시 열다섯 살이던 문송면 군이 수은 중독으로 사망한 것을 계기로 민주노조 운동 진영에서는 2001년까지 매해 7월을 ‘산재 추방의 달’로 정해 산재 사망자 추모 및 산재 예방을 위한 노동자 중심의 행사를 진행해왔다. 그러다가 한국노총이 2001년 4월 28일에 처음으로 ‘세계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 행사를 국내에서 진행했고, 2002년부터는 민주노총도 4월을 “노동자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로 선포하고 4월 28일에 맞추어 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 2011년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진행된 ‘살인기업 선정식’ >
 (출처: 매일노동뉴스 2011.304.26)

1) http://en.wikipedia.org/wiki/Workers%27_Memorial_Day

2.2. 1988년 15세 소년의 죽음과 2011년 2,114명의 죽음

충남 서산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문송면 군은 어려운 집안 형편으로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낮에 공장에서 일을 하면 밤에는 영등포 산업체 특별학교 야간반에 다닐 수 있게 해준다는 이야기에 중학교 졸업식도 하기 전인 1987년 12월, 친구들과 함께 교감 선생님의 손을 잡고 서울로 올라갔다. 소년은 온도계와 압력계를 만드는 협성계공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다. 좁고 환기도 되지 않는 공간에서 신나로 압력계 커버를 닦는 작업, 온도계에 수은을 붓는 작업 등을 했다. 1988년 2월 초, 일을 시작한지 두 달 만에 몸이 아프기 시작했다. 마침 음력설을 맞아 고향집에 내려갔다가 소년은 발작 증세를 일으켰다. 깜짝 놀란 가족들은 동네 병원도 찾아가고 서울로 올라와 대학병원에도 데려가 보았지만 병의 원인을 찾지 못했다. 가

족들은 겨우 열다섯 살인 아들을 이대로 죽일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송아지를 팔아 돈을 마련하여 서울대 병원을 찾아갔다. 다행히 당시 주치의는 직업병에 대한 지식이 있었고, 피검사와 소변검사를 통해 수은과 유기용제 중독을 밝혀냈다. 하지만 회사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노동부는 산재 신청을



< 1988년 당시 사건을 다룬 동아일보 기사 >

반려했다. 소년의 가족들은 노동부, 법률구조공단 등을 찾아다니며 도움을 청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그러다 마침내 구로의원 산재상담실을 찾게 되었고, 그 곳을 통해 소년의 사정이 언론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노동부는 역학 조사에 나섰고, 마침내 산재 승인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서울대 병원이 산재 요양기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치료를 받으려면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만 했다. 6월 29일, 소년은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이틀 만인 7월 2일 새벽에 숨을 거두었다. 만 열다섯 살, 학교를 다녔다면 고등학교 1학년이었을 소년이 일터에 발을 디딘지 6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당시 회사는 문송면 군이 다루는 물질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려주지 않았다. 환기시설은 커녕 마스크도 제공하지 않았다. 협성계공에는 이미 그 전에도 6명의 수은 중독 사례가 있었고, 작업환경 측정 기록도 가지고 있었다. 만일 사측이 작업 환경 개선 노력을 했었다더라면, 노동부가 제대로 감독을 했었다더라면 소년의 헛된 죽음은 없었을 것이다.

15세 소년의 죽음은 매우 비극적인 사건이었지만, 역설적으로 한국 노동자 건강권 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노동 운동 진영은 노동자 건강 문제를 노동조합 운동 내에서 다루기 시작했다. 정부도 이를 계기로 1989년에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을 설립했다. 원진레이온 노동자들은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고 자신들이 직업병에 걸렸음을 자각하고 투쟁에 나섰다. 소년의 죽음이 아주 헛된 것만은 아니었다.

“문송면,
 그는 열다섯 꽃다운 나이에
 수는 중독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우리 노동자가 얼마나 참혹한 환경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일하고 있는가를
 생생하게 증거했습니다.
 이곳은 머지않아 그의 부활의 터전이 되고
 앞으로 산업재해 없는 새 세상을 이룰 때까지
 모든 노동형제들이 그 뜻을 새겨나갈
 첫 출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故 문송면의 묘비명-



<문송면 20주기 추모비>

문송면 군의 죽음으로부터 24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지난 해, 대형할인점 시장점유율 1위인 이마트 탄현지점에서는 지하 1층 냉동기를 점검하던 노동자 4명이 질식사했다. 창원에서는 크레인 해체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크레인에 깔려 사망했다. 울산에서는 세 건의 폭발 사고로 수십 명의 노동자가 사상을 당했고, 전국의 4대강 공사 현장에서는 건설 노동자들의 사망 소식이 끊이지 않았다. 올해에는 공황 장애를 호소하던 서울 지하철 기관사가 자신의 일터에서 투신자살하고, 충남 보령에서는 발전소 매몰사고로 두 명이 사망했다. 그나마 이것들은 언론에 크게 보도된 사건들이다. 한국에서 작년 한 해 동안 일터에서 혹은 일 때문에 죽은 이는 2,114명이다. 하루 6명 꼴이다. ‘노동자’ 2천명이 아니라 매년 ‘무고한 시민’ 2천명이 누군가의 잘못으로 죽는다면 과연 이를 용납할 수 있을까?

3. 숫자로 보는 일하는 사람들의 죽음

3.1. 압도적 1등, 기이한 통계

해마다 2천 명이 넘는 시민들이 일하다가 발생한 손상²⁾과 질병으로 죽어간다.³⁾ 다치거나 병에 걸리는 노동자도 10만 명에 육박한다. 산재로 인한 사망 만인율⁴⁾은 1991년 이후 줄어들고는 있지만 2010년에도 여전히 1만 명 당 약 1.6명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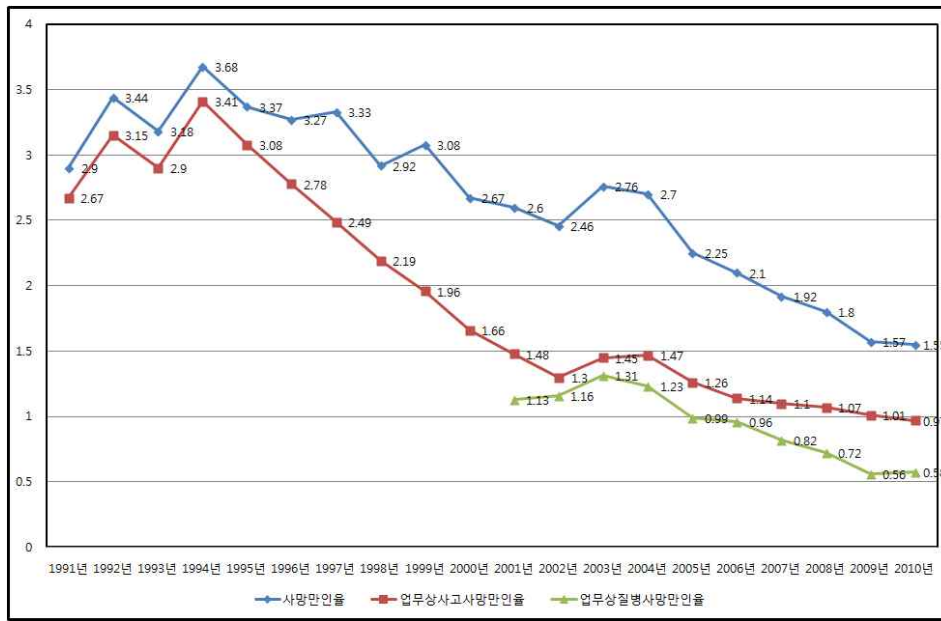
<표> 연도별 전체 재해자 수와 산재 사망자 수

연도	전체 재해자 수			산재 사망자수		
	사고	업무상질병	소계	사고	업무상질병	소계
2002년	76,494	5,417	81,911	1,378	1,227	2,605
2003년	85,794	9,130	94,924	1,533	1,390	2,923
2004년	79,691	9,183	88,874	1,537	1,288	2,825
2005년	77,916	7,495	85,411	1,398	1,095	2,493
2006년	79,675	10,235	89,910	1,332	1,121	2,453
2007년	78,675	11,472	90,147	1,383	1,023	2,406
2008년	86,072	9,734	95,806	1,448	974	2,422
2009년	89,100	8,721	97,821	1,401	780	2,181
2010년	90,842	7,803	98,645	1,383	817	2,200

* 자료 : 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통계

2002~2010년 통계를 살펴보면, 손상으로 인한 사망 중에서도 추락 (30%), 운수사고, 감김·끼임 (‘협착’)에 의한 것이 60%를 차지하며, 그 외 미끄러지거나 넘어짐 (‘전도’), 낙하하는 물체에 맞음 (‘비래’), 충돌, 무너짐·내려앉음 (‘붕괴·도괴’), 중독·질식, 감전, 폭발, 화재 등이 흔한 사인이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 10건 중 4~5건은 뇌심혈관질환에 의한 것이다.

- 2) 흔히 사용되는 ‘사고 (accident)’라는 단어는 예측 못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혹은 부주의나 무지에서 발생한 사건을 칭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들이 결코 무작위로 (random) 발생하지 않으며 사회적으로 유형화된다. ‘사고’라는 용어가 불평등과 책임성의 본질을 흐린다는 점에서, 우리는 질병이 아닌 외인(外因)에 초점을 두는 적합한 보건학적 용어인 ‘손상 (injury)’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 3) 물론 이는 ‘산재’라고 공식적으로 인정된 사례들만을 헤아린 것이다. 언론에 보도된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건이나 퀵서비스 노동자 사례들에서 알 수 있듯, 한국사회에서 산재로 인정받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수치는 그야말로 ‘최소추정치’라 할 수 있다.
- 4) 사망 만인율 = 사망자 수 / 노동자수 * 10,000 (사망자수는 재해당시의 사망자수에 요양 중 사망자수 및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자 수를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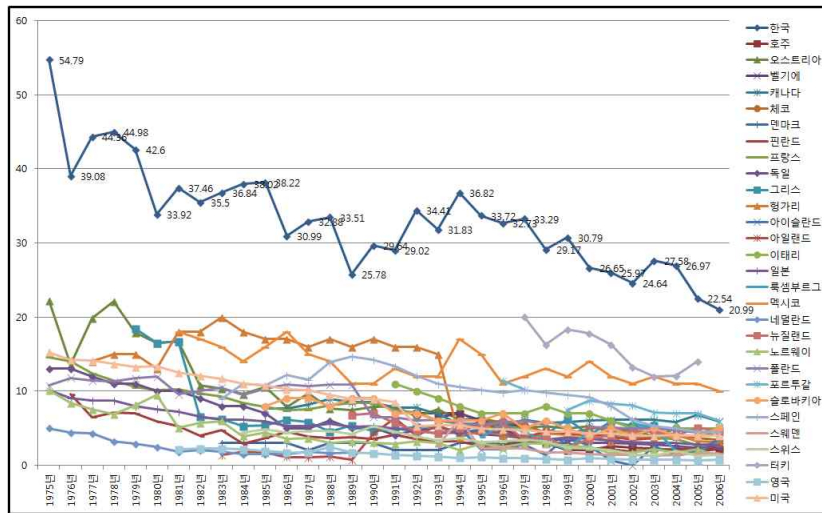


< 연도별 전체 산재사망 (손상과 질병) 만인율의 변화 >
(자료 : 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통계)

누적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데 비해, 손상으로 인한 사망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것은 특이한 현상이다. 비교적 짧은 시간 내 질병 사망률이 급감한 것은 질병 발생 자체의 감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이는 관리가 잘 되어 질병의 치명률이 낮아지거나, 혹은 산재로 인정받는 직업성 질환의 숫자가 줄어들었음을 시사한다.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나고 예방효과가 비교적 단시간 내에 나타나는 손상 사망에는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직업성 질환에 대한 획기적인 치료방법이나 관리전략이 도입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는 직업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과소추정되었음을 강력히 시사한다. 그나마 현재의 높은 산재사망도 매우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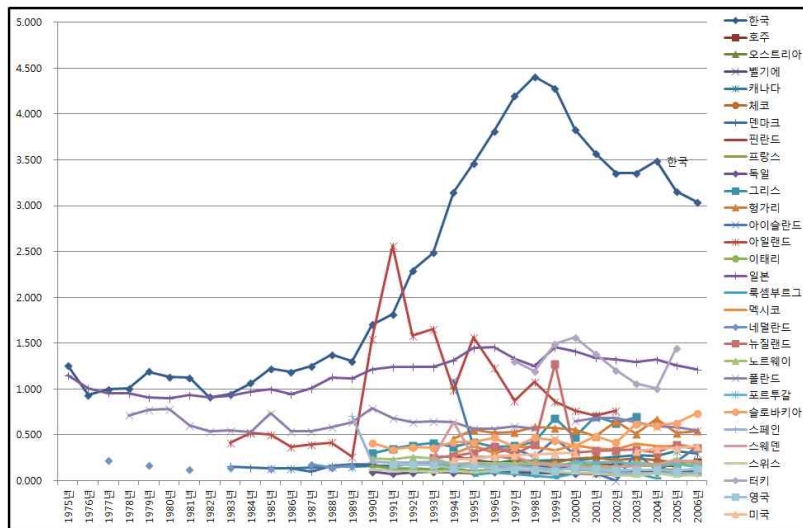
이러한 추론은 국제비교 결과에서도 재현된다. 한국의 산재 사망 수준은 OECD 30개국⁵⁾과 비교할 때 단연 높다. 그림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10만 명당 10명 미만의 사망률을 보이고 있는 것과 뚜렷하게 대비된다.

5) 국제 비교를 위한 자료는 「김수근, 안홍엽, 이은희. OECD 국가의 산업재해 및 사회·경제활동 지표변화에 관한 비교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9」 보고서의 부록 표1, 표2를 이용하였다.



< OECD 30개국의 연도별 산재 손상 사망 10만인율 (1975-2006년) >

특히 주목할 것은 비치명적 손상을 포함을 포함한 전체 재해들 중에서 사망 비중이 유독 높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 수치가 1% 내외인데 비해 한국은 3%를 넘는다.



< OECD 30개국의 전체 산재 중 사망 10만인율의 백분율(%) >

이는 유독 한국에서 재해의 치명률이 높거나, 혹은 비치명적 손상이 과소 보고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어느 경우이든, OECD 국가들 중에서 한국이 산재 사망률이 1위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전자가 사실이라면 한국의 시민들이 일하는 작업장의 안전보건 환경이 치명적으로 위험하고 국가 안전보건 정책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며, 후자가 사실이라면 실제 발생하는 일터의 건강문제들이 상당히 은폐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둘 중 어느 것도 바람직하다고는 할 수 없다.

3.2. 일 때문에 비롯된 죽음, 그 후

해마다 2천 명이 넘는 시민들이 일을 하다가 죽어가지만, 이 중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언론에 언급되는 경우는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특별한 사연이 있을 때, 혹은 ‘무고한’ 제3자가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뿐이다. 그나마 사건이 발생한 이후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고 마무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는다. 그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언론에 보도된 몇몇 ‘큰 사건’을 살펴보자.

● 9명의 죽음, 5명의 중상

2005년 10월 6일, 경기도 이천의 'GS홈쇼핑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다 건물이 붕괴되는 사건이 있었다. 노동자 14명이 매몰되어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상을 입었다. 당시 시공사는 GS건설이었고, 삼성물산과 공송기업이 하청업체로 공사를 담당하고 있었다. GS건설과 삼성물산은 서로에게 사고의 책임을 돌리며 법정 공방을 벌였다. 6년이 지난 2010년 6월 말, 대법원은 GS건설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 삼성물산에게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2005년 당시 노동부는 두 업체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3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을 서울시와 송파구에 요청했었다.⁶⁾ 하지만 서울시와 송파구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린다면 6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010년 대법원 판결 이후 서울시는 2006년의 ‘중대재해 특별사면’에 GS건설 건이 포함되는지 청와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청와대는 이 건도 특별 사면에 포함된다는 답변을 했다. 이로써 9명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영업정지 3개월, 과징금 3천만 원도 없이 700만원의 벌금으로 마무리되었다.

● 15명의 죽음, 1,394건의 범위반

2006년 5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한국타이어’에서는 7명의 돌연사를 포함하여 15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대전지방노동청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산재 은폐 및 보고 기한을 넘긴 경우 160건, 안전 교육 등 관리 소홀 17건 등을 포함하여 무려 1,394건의 범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사법처리 554건, 과태료부과 273

6) 종합전문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은 주소지 관할 기초 광역자치단체에 위탁 위임되어 있다.



< '한국타이어 대표이사 구속수사 촉구' 1인 시위 >
 (미디어충청 2008.01.29)

대전공장 안전관리책임자와 금산공장 책임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백만 원이 선고되었다.

● **씻물에 녹아버린 청년**

2010년 9월 7일, 충남 당진의 ‘환영철강’에서 일하던 29세 청년이 용광로에 빠져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용광로가 제대로 닫히지 않아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용광로 위 고정철판에 올라갔다가 발을 헛디더 용광로에 떨어진 것이다. 10만 원짜리 난간이나 4만 원짜리 자일만 설치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안타까운 죽음이었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커다란 공분과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결과로는 회사와 사업주에게 각각 5백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 것이 전부이다.

● **외주·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죽음**

2011년 7월 2일, 일산의 이마트 탄현점 지하 터보냉동기실에서 냉동기 수리작업을 하던 노동자 4명이 프레온 가스에 질식해 사망했다. 이들은

건, 위험기계기구 사용중지 14건, 시정지시 553건 등의 처분을 내렸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던 ‘한국타이어’와 일부 임원에 대한 1심 재판 결과, 한국타이어 법인은 벌금 1천만 원, 대전공장 안전관리책임자와 금산공장 책임자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백만 원이 선고되었다. 그리고 올해 1월 12일에 열린 2심 재판에서는, 한국타이어 법인에게 무죄, 대

광온(狂濶)에 청년이 사그라졌다.
 그 씻물은 쓰지 마라.

자동차를 만들지도 말 것이며
 철근도 만들지 말 것이며
 가로등도 만들지 말 것이며
 못을 만들지도 말 것이며
 바늘도 만들지 마라.

모두 한이고 눈물인데 어떻게 쓰나?
 그 씻물 쓰지 말고

맘씨 좋은 조각가 불러
 살았을 적 얼굴 흠으로 빚고
 씻물 부어 빗물에 식거든
 정성으로 다듬어
 정문 앞에 세워 주게.

가끔 엄마 찾아와
 내새끼 얼굴 한번 만져 보자. 하계.
 - 한 누리꾼의 추모시 -



외주업체와 그 외주업체의 하청업체에 소속해 있었고, 그 중 한 명은 등록금을 벌기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던 22살의 대학생이었다. 배관 해체작업을 하는 동안 환기를 실시하지도 않았고, 노동자에게 송기마스크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 사건 역시 언론에 보도된 이후 사회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특히나 등록금을 벌기 위해 나섰다 죽음을 맞이한 학생의 사연은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책임으로 ‘이마트’ 벌금 100만원, 지점장 벌금 100만원을 부과된 채 사건은 마무리되었다.

소개된 모든 사건들은 처리 과정에 시간이 적게 걸리던 오래 걸리던, 한결같이 숨방망이 처벌로 마무리되었다. 한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목숨값은 참으로 저렴하다.

4. 이들의 죽음은 불가피한 것인가?

일과 관련하여 사망이 발생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중층적으로 작동한다. 그러나 이를 ‘구조적인’ 문제, ‘복잡한’ 문제라고 뭉뚱그리는 순간 해결책을 찾는 것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예방과 관리대책에 주목하여 몇 가지 요소들을 구분해보고자 한다.

이 장에서는 산재 사망의 ① 기술적 측면, ② 생산 방식과 노동조직 측면, ③ 문화적·사회적 측면, ④ 법적·제도적 측면, ④ 권력관계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문제의 원인을 살펴볼 것이다. 주로 ‘사망’에만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산재보상 인정절차의 불합리함, 산재보험의 낮은 적용성 같은 중요한 문제들을 미처 다루지 못했음을 미리 밝혀둔다. 또한 가장 극단적이고 심각한 결과인 ‘사망’에 초점을 두고 기술하지만, 비치명적인 손상이나 질환도 강도와 범위에서만 다를 뿐 문제의 본질은 다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 인간은 실수하는 불완전한 존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가장 기초적이고 쉬운 방법은 안전한 기계를 사용하고, 유해하지 않은 물질을 사용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장을 설계하는 것이다. 설계 자체가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이 정신만 바짝 차리고 있으면, 보호 장비만 제대로 착용하면, 문제가 안 생길 것이라는 생각은 지극히 비현실적이다. 스스로 생각해도 어이없는 줄음운전의 경험, 혹은 중요한 시험이나 업무마감 시한을 앞두고 터무니없이 깜빡잠에 빠졌다가 혼비백산했던 경험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인간이란 실수를 하는 불완전한 존재다. 자동장



< TV 뉴스가 재구성한 용광로 추락 당시 상황 >
 (출처: 위키트리 2010.09.08)

치와 기계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인간의 실수에 대비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장치는 때로는 생과 사를 가르기도 한다.

이마트 지하 터보 냉동기실에서 노동자들이 사망한 것은 그들이 부주의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누출된 프레온 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워 바닥으로 내려앉지만, 환기구는 지상 4.4m 높이에 설치되어

있었던 것이다. 용광로에서 일하던 청년은 잠시 주의가 흐트러졌거나 실수로 발이 미끄러졌을

것이다. 하지만 용광로 주위에 펜스만 있었어도 그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발을 헛디디거나, 다른 생각에 빠져 걸다가 다른 사람과 부딪히는 게 흔한 일인 것처럼, 일을 하다가도 얼마든지 작은 실수들을 할 수 있다. 그 사소한 실수가 엄청난 재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돕는 것이 바로 기술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러한 안전 기술을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것을 비용 문제로 혹은 무관심 때문에 여전히 무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 댓가는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이다.

● 생산의 지점이 바로 문제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내국인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 등으로 분절된 노동 시장에서 이제 힘들고 위험하고 더러운 작업은 비정규직, 하청업체, 이주노동자들의 몫이 되어가고 있다. 이들은 낭떠러지 노동시장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 살인적인 노동 강도를 견디며 재해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된 채 말 그대로 무방비 상태로 일하고 있다. 설 연휴에 공장 직원들이 쉬는 동안 외주 업체를 고용하여 기계 세척 작업을 시켰던 경남 함안의 기계공장이나, 냉동기 수리작업을 위해 외주업체와 외주업체의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고용했던 이마트를 생각해 보자. 정규직원들은 투자하고 보호해야 할 인적자원이지만, 하청·외주·파견업체 노동자들은 내 알 바 아니라는 것이다. 이제 하청이나 외주를 통해 위험마저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혁신적인 경영기법 썸으로 여겨지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다.



< 도시철도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기자회견 >
 (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2012.03.26)

그런데 정규직 혹은 원청업체 노동자라고 해서 마냥 좋은 것만도 아니다. 사정이 조금 나은 것일 뿐 그들 역시 인력 감축에서 비롯된 노동 강도의 강화와 전 방위적인 노동 통제에 시달리고 있다. 인건비 절감을 위해 두 명이 하던 일을 혼자서 하라는 회사의 요구에 따라, 도시철도공사의 ‘정규직’ 기관사들은 혼자 기관차를 몰았다. 전기요금

을 아껴야 한다며 터널 내 형광등도 꺼져 있었다. 공황장애에 시달리며 좁은 운전실에서 홀로 어두운 터널을 오가던 기관사의 죽음은 현재의 생산 구조가 만들어낸 비극이다.

● “남의 돈 벌어먹기가 쉬운 줄 아나?”

우리 사회에는 안전한 일터를 가로막는, 눈에 보이지 않는 편견과 암묵적 관행들이 존재한다. “남의 돈을 받고 일하니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는 생각, 위험과 고생을 참고 견뎌야 더 나은 ‘일꾼’이 될 수 있다는 생각, 노동자가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사고가 일어날 리 없다는 생각, 건설일용직이나 청소노동자, 혹은 이주노동자들처럼 위험하고 남들이 꺼리는 일을 하는 이들은 전문기술이나 자격이 모자라니 그런 일을 하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 등이다. 이러한 편견들에 소위 ‘빨리빨리’ 문화까지 결합하면 재해 발생의 ‘홀륭한’ 토양이 된다.



< 2005년 1월 태국 출신 이주노동자의 노말핵산 중독사건 >

노동자가 돈을 받고 제공하는 것은 노동력이지만, 건강과 생명이 아니다. 모든 인간은 생명과 안전의 권리가 있고, 모든 노동자들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 남의 돈을 받는다고 죽음까지 감수해야 할 이유는 없으며, 사회적으로 비천하고 낮은 임금의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일을 하는 인간의 가치까지 비천하고 낮은 것은 아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우리 사회가 노동자의 목숨과 건강이 무언가와 교환이 가능한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이 세상에 죽어도 아깝지 않은 목숨이란 없다.

● 법과 제도는 왜 존재하는가?

생산 구조의 문제, 사회문화적인 편견을 단숨에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다. 만능해결책은 아니지만, 법과 제도는 이러한 문제들을 일부 개선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수단이다. 예를 들면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유해작업 도급금지 조항이 있다. 물론 이 법에서 정한 유해 또는 위험작업의 범위는 ‘도급작업, 수은·연·카드뮴 등 중금속을 제련·주입·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등 매우 협소하여 실효성이 높지는 않다. 하지만 법 개정이나 노동부령 등을 통해 유해 작업의 범위를 확대한다면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좀 더 분명

하게 할 수 있다. 사회문화적 측면과 관련해서도 사내 하청 사용을 엄격하게 통제하거나, 비정규직에 대한 안전보건 상의 차별을 없애는 조치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적절한 안전기준을 설정하고 이것이 지켜지도록 규제·감독하고, 위반사례를 처벌하는 것은 종합해결책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선결조건이다. 지난 1997년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이후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제가 크게 완화되고, 이후 몇 년 동안 산업재해가 크게 늘어났던 경험은 법과 제도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그런데 법과 제도의 측면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주의 책임을 분명히 밝히고, 분명한 댓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나 위험을 생산하고 관리하며 이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하는 대기업 원청과 발주처의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 한다. 9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어도 벌금 700만원으로 끝나거나, 15명이 죽어도 회사에 면죄부를 주는 한, 원청의 직접적인 책임면제를 승인하는 한,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사람의 목숨에 가격을 매길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기업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돈을 그들이 무시할 수 없는 액수로 부과해서 사고 후 기업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안전을 무시한 대가로 벌어들이는 이익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 그리고 중대 재해에 책임이 있는 사업주를 엄중하게 처벌해서 그들이 빼앗은 것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보게 해야 한다. 영국의 기업살인법처럼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기업주를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처벌하는 법이 한국에 있었다라면, 터무니 없는 이유로 노동자들이 대량 사상하는 사건들이 이처럼 반복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 저울질 당하는 노동자의 목숨값 >
 (출처: 인권오름 2012.12.06)

● 현장에 노동자의 목소리를!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것이다. 기술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위험한 작업을 하청받지 않으며, 노동 강도 강화를 저지하고, 인력 감축에 맞서며, 차별을 없애고, 비정규직을 없애고, 기업살인처벌법 같은 법과 제도를 강제할 수 있는 정치적인 힘이 노동자에게 없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그저 본인이 더 조심하거나, 좀 더 안전한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노력하거나, 산재가 발생했을 때 산재는 언감생심, 회사가 공상 처리라도 해주기를 기대할 뿐이다. 2008년에 진행된 ‘서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에게 의자를!’ 캠페인은 커다란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많은 언론들이 관심을 가졌고, 소비자들의 반감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달리 고객들은 매우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다. 규제도 만들어졌고, 실제로 다수의 할인점과 백화점에서



< 서비스 노동자 건강권 실현 캠페인 >
 (출처: 매일노동뉴스 2011.07.22)

서비스·판매직 노동자들을 위한 의자를 제공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현장에서 의자를 이용하는 노동자들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제공된 의자들이 작업에 적합하지 않거나, 더 중요하게는 막상 의자가 있어도 일이 많아서 혹은 눈치가 보여서 의자를 실제로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법과 제도도 중요하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일하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이다.

삼성 반도체 사업장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이 초기에 작업현장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별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었다면, 그래서 사측이 성실하게 이 문제 해결에 나섰더라면, 지금처럼 많은 노동자들이 병에 걸리고 또 산재인정을 받기 위해 힘겨운 싸움을 벌이는 일이 없었을지도 모른다.

기술적인 개선도, 제도적인 개선도 모두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내는 일이 결코 어렵지 않아야 한다. 노동조합 같은 노동자의 방패막이 있어야 하고, 또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기업의 과민반응과 사회의 편견이 사라져야 한다. “시민의 불편을 볼모로...” 라며 노동자의 쟁의활동을 비난하는 주류 언론의 선동에 ‘파업하는 노동자도 시민, 불편을 겪는 시민도 노동자’라는 연대의식으로 맞서지 않는 한 일하는 사람의 사회적 배제는 극복하기 어렵다.

5. 결론

누군가 죽어가며 생산한 타이어가 장착된 자동차를 타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아무리 에밀레 종의 절절한 사연에 감동받은 이라도 청년의 뼈와 살이 녹아있는 철로 만든 바늘을 사용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 하던 대학생을 질식사하게 했던 냉동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어컨 바람을 쐬며 쇼핑을 하고 싶은 이도 없을 것이다. 노동자의 원혼이 떠도는 지하철을 타고, 노동자의 피가 묻은 아파트에서 살고 싶은 이도 물론 없을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이웃 시민이고, 또 우리 자신이기도 하다. 실험실 철망상자 안에서 제 동족의 살을 뜯는 실험쥐의 광란 이야기를 듣고 몸서리쳤던 이라면, 오늘날의 우리 사회는 그와 얼마나 다른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잠자는 시간을 제외한다면 하루의 가장 많은 시간을 일터에서 보낸다. 일을 한다는 것은 돈을 벌어 가족과 나의 삶을 지탱하고, 또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를 만들고 성취감을 얻는 ‘바람직한’ 삶의 경험이어야 한다. 우리의 일터가 목숨을 걸어야 할 전쟁터나 순교의 공간일 필요는 없다. 우리 일하는 사람들은 서로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관심을 갖고 시민적 연대를 발휘해야 한다.

세계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 공식 슬로건은 이렇다.

“죽은 자를 기억하고, 산 자를 위해 투쟁하라 (Remember the Dead! Fight for the Living!)”

우리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오늘 이렇게 주장한다.

“2,114명의 시민들, 그들의 죽음을 기억하고

2천 4백만 일하는 시민들을 위해 투쟁하자!”

사단법인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건강할 권리를 생각합니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함께 공부하고 연구하며 실천하는 공동체를 꿈꿉니다.

우리 연구소는

우리 사회의 **건강담론과 대안**을 만들어 가는 민간 연구소로,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금만으로 운영되는 **독립연구기관**을 지향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으로

모두가 건강한 세상을 향한 사회 변화의 큰 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손을 잡는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단법인 시민건강증진연구소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140 인산빌딩 3층 302호

§ 전화 : 070-8658/8659-1848 § Fax : 02-581-0339

§ 누리집: <http://health.re.kr> § 전자우편: phikorea@gmail.com

§ 후원계좌 : 하나은행 199-910004-60804 (사)시민건강증진연구소

